

축산업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축산인 대토론회

한국오리협회 지정토론자 대표, 모란식품 김만섭 대표이사 참석

글 · 사진 : 편집부



축산인 대토론회 지정토론 모습



농식품부 이천일 과장의 주제발표

지난해 말 발생한 FMD(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로 국내 축산업은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바꾸고자 지난 3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 이는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해 국내 축산업을 선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 대책에 축산인의 우려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축산신문사(회장 윤봉중)와 축산관련단체협

의회(회장 이승호)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30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과 이천일 과장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주제발표로 열린 지정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최윤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각 7개 단체 대표 토론자들과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 농협중앙회 권영웅 부장,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이정우회장,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한국사료협회 장원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우리 협회 김만섭 고문(모란식품 대



① 김만섭 고문의 지정토론 내용을 유심히 듣는 농식품부 이천일과장
 ② 한국오리협회 지정토론자 대표로 참석한 김만섭 고문
 ③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④ 지정토론자 좌장 최윤재 교수

표)은 “축산 선진화가 과연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무조건 자동화 시설을 갖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FMD와 함께 AI도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80%만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AI의 경우 철새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이다.”며 “더욱이 모든 정책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그 동안 정부는 FMD, AI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마다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과연 그 정책들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F1 오리의 경우 축산법 상 불법이지만 이번 AI사태 때 하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F1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돼야 농가들이 불법적인 축산업을 안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축산에 대하여 토론하기도 했다. 김연화 원장은 “금번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방역 강화와 축산업허가제를 꼽을 수 있고 우리 축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대책의 대부분이 주로 생산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 및 소비단계를 고려한 대안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제역사태와 각종 식품안전사고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고 이에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화 원장은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단방역과 위생안전을 모두 심사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축산물HACCP제도를 축산업선진화 방안에 포함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발표했다.